

현대 전쟁서 확인된 드론의 위력… 대비책 시급하다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원자력대학원 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㉘드론 기술의 진보와 우리의 대응

일반적으로 무인비행체(UAV)를 의미하는 드론은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의 결과물이다. 즉, 민수용과 군용으로 나뉜다는 얘기다. 현재 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서도 군용 드론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군사적 민수용 드론은 농작물 방제 및 화물 수송, 화재 진압, 범죄 단속, 항만 관리, 영상 촬영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인다. 첨단화하는 드론은 인공지능(AI)이나 인터넷 등의 신기술과 융합 내지 연계되고 있다. 민수용 드론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용 드론은 미국이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주로 군용 드론에 대해서 알아본다.

군용 드론은 정찰용 또는 공격용으로 사용된다. 원래 감시 및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특히, 2000년대초 ‘테러와의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장착한 무장 드론으로 진화했다. 방산 전문 컨설팅업체인 틸그룹이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드론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항공산업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할 분야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호크’는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인데,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로 고도 20km에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드론은 무엇보다도 유인 비행체에 비해, ‘파분하고 더러우며 위험하고 심층적인(소위, 4

D)’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공격용 드론은 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장착하여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한다. 2001년 9.11. 직후, 미국은 프레더터 드론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한 바 있다. 대테러전 수행 과정에서 군용 드론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며 비난여론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드론에 정밀타격무기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시리아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소위 ‘닌자’ 미사일은 대표적인 정밀타격무기다. 2017년부터 실용되고 있는 닌자 미사일은 마치 닌자(忍者), 즉 자객처럼 제거 대상은 은밀히 공격한다. 주변 민간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테러 주모자 등 특정 인물만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다. 닌자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약이 든 탄두를 탑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으로 인한 폭발도 일어나지 않으며,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에 펼쳐지는 6개의 예리한 칼날이 대상 인물을 정확히 제거한다. 미국은 20여 년의 추적 끝에, 오사마 빈라덴과 함께 9.11. 테러를 주도한 2인자 ‘알 자와히리’를 2022년에 닌자 미사일로 살해한 바 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대 드론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우크라이나 상공에 매일 수백 대의 정찰용 및 공격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적군 탱크가 움직이면 5분 이내 드론을 띄운 후에, 이를 토대로 3분 이내 공격에 돌입한다. 이러한 드론의 등장으로 탱크 전성시대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드론 강국 중 하나인 이란은 침략국 러시아에 드론을 대량 수출하고 있어서 문제다. 올 10월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 드론을 사용하여 하마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신속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드론이 21세기의 전장에서 ‘실제적인 게임체인저’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기술이 진보하면서, 드론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AI 드론’이다. 군용 드론에 AI를 부착할 경우, 기동성이 배가되어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AI가 드론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은 곧 인간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기술의 주인’으로서 기술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술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은 그 노예가 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악몽이다. AI 윤리강령을 포함하여, 관련 규범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확인되는 드론의 위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에게 대한 실존적 위협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속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격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데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올 7월 열병식을 통해 ‘북한판’ 글로벌 호크와 리퍼 등 공격용 드론을 과시한 만큼, 우리도 드론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필요시 관련 장비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저고도 드론 파괴용 레이저 기술의 실용화도 서둘러야 할 때다.

社說

청년유출 막기 위한 공동노력 우선돼야

전남도·교육청 교육특구 협력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유치 공모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교육청·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구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30억~100억 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특구 선정시 늘 불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 혁신,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등 다양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 지역소멸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을 발전시켜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담임을 구성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 발굴, 지역협의

체 구성 등을 통해 내년 2월 시범운영 1차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난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만 18~39세 청년층의 순유출 인구는 약 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을 발전시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답게 교육발전특구 공모 유치는 전남도의 선택이 아닌 사활을 걸어야 할 일이다. 전남도는 이미 교육부 공모의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룬다면 전남 교육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전남도는 교육발전 특구 선정 노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남의 청년유출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인재를 양성해도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교육청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 각계각층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대되는 광주의 전문예술극장 건립

소통으로 시민 함께 추진해야

광주시가 전문예술극장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광주에 국내 최대 복합문화센터를 착공한 것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키우겠다는 큰 그림이었다. 늦었지만 문화수도 광주를 완성시키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광주시가 추진기로 한 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와 뮤지컬 등 전문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장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전남 등 호남권을 아우르는 규모의 전문 예술극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21일에는 전문예술극장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수행기관도 선정했다. 전문수행기관은 내년 1월부터 1년 간 전문가와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구상부터 지역 여론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지 선정 등 건립사업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광주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광역시 가운데 전문공연장이 없는 곳은 광주뿐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민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에서 소외되는 등 문화향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임시로 설치한 가설극장 무대에 올린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광주·전남이 본산이나 마한가지인 판소리 공연도 전문극장이 아닌 임시 무대에서 공연되면서 세계적 수준에 오른 판소리의 가치나 작품성을 되려 떨어뜨리는 설움도 겪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가 꿈꿨던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서글픈 현실이다.

명품 공연이 활성화 되면 광주의 문화계가 한층 풍요로워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다. 문제는 효율과 활용방안이다. 규모에 집착하거나 건립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건립 규모와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건립 후보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건설과정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선택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전문예술극장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 가는 지에 달려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각) 영국 버밍엄 서튼 파크의 블랙루트 풀에서 크리스마스 수영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물에 뛰어들고 있다. 버밍엄=AP/뉴시스

서석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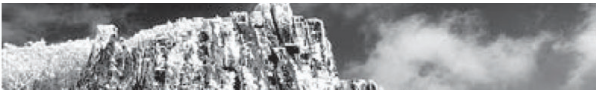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다. 국화나 구절초처럼 이름을 알면 화초지만 이름을 모르면 잡초이듯 이름은 자신을 밝히는 표징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하늘은 녹(祿)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했다.

최근 선거를 앞둔 정치판을 보자면 ‘이름값’을 못하는 이들이 수도룩이다. 태어나면서 훈장처럼 달고 나온 이름은 온데 간데 없고 ‘이재명’ 이름을 한줄 넣느냐 안 넣느냐를 놓고 호들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선 입지자들의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보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경력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 향후 예정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략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은 게 이유라면 이유타다.

과거를 거슬러 봐도 그렇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대통령 팔이’에 여념이 없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온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마케팅으로 국회에 줄줄이 입성했다.

아무리 ‘당선’을 목표로 한다지만 22대 총선에서도 선의의 경쟁은 눈짓고 찾아봐도 없다. ‘이재명 경력’ 한줄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 민주당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당내 경선 시 경력에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당대표 마케팅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청와대 근무를 ‘경력쌓기용’ 수단으로 까지 삼고 있다. 대통령과 대권주자와의 인연을 부각하면 표심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권력층인 정치인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사회이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아닌 권력자의 이름을 빌려 금배지를 쫓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예비후보들이 당선 후에도 과연 제대로 ‘국민 대변자’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의원의 꿈을 품고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라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